

유관기관 NEWS

산업자원부

올해 지방기업 육성에 7,568억원 투자

- 작년보다 7.5% 늘어... 산자부 '06년 국가균형발전정책방향 제시
- 지역연고산업 육성 709억원 ·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462억원 등 지원

연말까지 기업이전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맞춤형정보 제공
 산업자원부는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육성,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화,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등을 통해 혁신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올해 총 7,568억원('05년 대비 7.5% 증가)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진주 실크·순창 장류, 통영 진주와 같이 기초지자체의 지역 緣故산업 육성을 지원 (709억원)하는 한편

-광역지자체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광주 光산업, 경남 기계산업 등 4개지역 2단계 진흥사업(2,006억원)과 충북 반도체, 울산 자동차 등 9개지역 진흥사업(1,734억원) 등을 통해 기술개발, 연구장비, 마케팅 등을 통합 지원할 계획

또한, 지방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기업, 대학 등이 협력해 첨단보육시설, 연구시설, 경영지원시설 등을 한곳에 집적시켜 미래 스타기업을 육성하는 테크노파크 조성(포항, 충북 등 후발 8개)에 200억원을 지원하며,

-그간 골목이 연상되는 생산중심의 산업단지에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두뇌기능을 보강하여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사업에도 462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7개 시범단지: 광주(광산업), 창원(기계), 구미(전자), 울산(자동차), 반월시화(첨단부품소재), 원주(의료기기), 군산(자동차 기계부품)

중기청

산학협력지원사업에 530억원 지원

중기청은 올해 기술혁신형 기업 발굴·육성 및 기업 혁신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지난해(454억원)보다 16.7% 늘어난 530억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426억원,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지원 사업 34억원, 산학협력실 설치지원 사업 70억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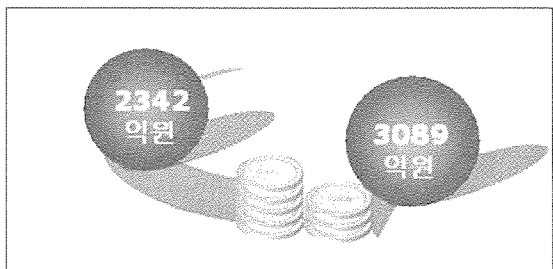
과제당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산학협력 과제의 경우 기술혁신 수준 평가를 의무화해 자가진단 평가에서 총 1000점 만점에 550점 이상이 돼야 산학 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계획서 제출시 기존 대학 중심으로 기획됐던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이 직접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협의회해 작성·제출토록 했다.

송재빈 기술지원국장은 "기술혁신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지원 사업 우수 모델을 적극 발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특허기술사업화 3,089억원 지원



특허기술사업화 3,089억원 지원

특허기술사업화 지원규모 전년보다 32% 증가

정부는 개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사



업화 촉진을 위해 지난해(2,342억원)보다 32% 증가한 3,089억원 규모의 '2006년 특허기술사업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농림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 등 정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위원장 :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는 '신제품개발자금'에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412억원을 배정하고 '창업자금'에 631억원, '양산 및 시설자금'에 445억원, '평가·보증 및 거래자금'에 425억원, 그리고 '연구개발 및 권리화 자금'에 176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동 지원규모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중소기업청), 기술사업화투자산업(한국산업은행), 특허기술가치평가보증(기술보증기금) 등 신규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30개의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원자금의 성격별로는 융자가 1,497억원으로 가장 많고, 출연이 588억원, 투자가 545억원, 보증이 350억원, 보조가 109억원의 순이다.

정부는 이밖에 사업화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특허청,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8개 기관에서 기술·경영지도, 기술인증·보증지원, 기술이전·거래지원, 홍보 및 판로개척, 전문인력 양성 등 총 22개의 간접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허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창업자는 관리기관(한국발명진흥회) 및 지원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7개 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사업화지원팀 02-3459-2845~2851 | 특허청 산업재산진흥팀 042-481-5258)

**고부가가치산업 인력 특별 양성
산·학협력 인력양성에 4개 부처 943억 지원**

정부가 943억원을 투입해 '고부가가치산업 인력 특별 양성' 등 산·학협력 인력양성 사업 확산에 적극 나선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는 공동으로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확산이라는 6개 세

부사업에 모두 943억원을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날 4개 부처는 '2006년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확산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차세대 성장동력 분야 기업에 시급히 필요한 엔지니어 양성을 위한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사업을 새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현장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3년간 디스플레이·차세대 반도체·차세대 이동통신 분야의 인력을 집중 양성, 5000여명의 현장 밀착형 인력을 길러낼 방침이다.

또 이공계 자질보유 인력을 조기 양성하기 위해 '산·학협력 우수 실업고' 지원 대상을 지난해에 이어 추가로 15개 고교를 선정,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산·학협력 전문대와 특성화대학 사업, 산·학협력 중심 대학 사업, 최우수 실험실 사업, 교육훈련 혁신센터 사업 등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미국 BMR테크놀러지와 공동 협약 체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센터장 신동찬)는 최근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인 BMR테크놀러지(대표 리윤주)와 나노기술(NT)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MOU)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나노센터는 BMR테크놀러지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화학기상증착장비(CVD) 개발 △개발장비의 평가 △박막 증착 및 패터닝 공정개발 △기술·정보·인적 교류의 활성화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BMR테크놀러지는 광주 나노기술센터와 협력해 광주지역에 한국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해 올해부터 3년간 200만달러를 투자하고 20여 명의 연구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R&D

센터 설립에 이어 향후 장비생산 공장을 설립해 반도체 공정용 CVD 장비의 국내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 1996년 설립된 BMR테크놀러지는 반도체 공정장비 핵심 부품 개발업체로 플라즈마 소스(Plasma source) 개발을 시작으로 CVD와 식각장비(etcher) 및 박리장비(asher) 등을 생산하고 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있는 광주나노기술센터는 산자부 등으로부터 총 782억 원을 지원받아 광주첨단산업단지내 센터 건물을 착공중이며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관련 나노공정·장비 국산화 △나노측정 및 분석장비 개발 △나노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고급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5월부터 특허료·우선심사신청료 인하

특허청은 고객의 비용 부담 완화와 편의 증진을 위해 특허 연차 등록료의 누진 체계를 일부 하향 조정하고, 특허우선심사 신청 시 청구항에 따른 가산료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특허료 등의 징수 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5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료는 현행 3년 단위로 2배씩 증가하던 연차 등록료 누진 체계를 일부 완화, 13년차 이상 기본료는 36만원으로, 10년차 이상 가산료는 5만5,000원으로 각각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또 특허 우선 심사 신청 시 기존 가산료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정액 16만7,000원만 납부하면 우선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분할·합병에 따른 출원인 변경 신고료 및 특허권 등의 이전 등록료 인하 대상을 '상법'의 규정에 따른 회사에서 모든 법인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후 공동으로 특허(실용신안)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심사청구료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김종안 정책홍보관리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청 차원에서는 50억~60억여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되지만, 특허권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극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통부
2010년 세계 최고 수준 BcN 구축

u-코리아 기본계획 확정

오는 2010년에는 유선 1,000만 가입 가구, 무선 1,000만 가입자에게 광대역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통합망(BcN)이 구축된다. 또 유비쿼터스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u시티가 건설되고 무선통신기술인 전자태그(RFID)가 통신 인프라의 핵심기술로 자리잡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0년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비쿼터스 인프라 위에 세계 최초의 유비쿼터스 사회를 실현하게 될 전망이다.

제26차 정보화추진위원회는 7일 제26차 회의를 열고 범국가적 비전과 공공·경제·사회 등 분야별 혁신전략을 제시하는 'u코리아 기본계획(2006~2010년)'을 확정,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BcN서비스를 내년까지 D1급 회선에서 초당 30프레임의 영상 전송이 가능한 전화서비스, 유선과 WCDMA 간 영상전화 연동, 양방향 DMB를 BcN에 통합하는 등 통신·방송·인터넷을 통합한 'BcNII'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또 전송망은 테라급 DWDM장비와 광스위칭 장비인 OXC 전송망이 기본으로 구축되며, 가입자망은 50M~100Mbps서비스가 가능한 FTTH(xDSL·HFC·AON 등)로 고도화된다.

BcN계획의 3단계인 오는 2010년까지는 XVGA급 화질의 영상전화와 4G 및 FTTH 간 통합 등이 이뤄지며, 유무선과 방송간의 통합을 총망라하는 새로운 개념의 제어 플랫폼이 구축된다. 전달망은 2단계인 테라비트급 DWDM에서 진화한 페타비트급 DWDM 장비가 백bone에 구축되며 가입자망은 FTTH가 완벽하게 구축돼 통합된



다. 무선부문은 30Mbps급 와이브로와 3.5세대(Beyond 3G) 서비스를 통해 50Mbps급으로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된다.

정통부는 이 같은 일정으로 2010년까지 유선 1000만 가입 가구와 무선 1000만 가입자에게 광대역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광대역 통합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통부는 이번 u코리아 기본계획을 통해 무선통신기술인 RFID를 다양하게 적용해 모바일 u서비스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성욱 정보화기획실장은 "이번 계획은 정보통신 일등국가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면서 "오는 2010년까지 u코리아 구축을 통해 1인당 국민소득 2만2,000달러, 국가 경쟁력 15위권, 국민 삶의 질 25위권 등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3억이상 정책자금 전용계좌 개설해야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화 등 정책자금 관리방안 마련

앞으로 3억원을 초과한 정책자금(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건당 5백만원이상의 지출에 대해서는 사용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정책자금의 당초 용도의 사용을 방지하고 정책자금의 건전화에 위해 정책자금 전용계좌 도입 및 대출금사 용내역서 제출 제도를 4월 정책자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용도의 사용 유형(별첨)에 대한 지침을 사전에 사전유용, 특수관계자 대여, 특수관계자 차입금 상환, 비영업용자산 취득 등으로 분류하고 정책자금 건전화를 위한 사후점검시 이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정책자금 전용계좌 :

3억 초과분의 운영자금에 대해 중소기업 법인통장과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에 대한 자금의 입출금관리

*대출금 사용내역서 의무화 :

운영정책자금 중 거래 건당 500만원이상 거래에 대해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화

또한 점검결과 용도의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3년간 신규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등 위반시 제재조치 방안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청은 이를 통해 정책자금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정책자금의 집행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정책자금의 건전화를 위해 윤리경영심사시스템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